

2019 경기도

규제합리화 사례집

국토· 지역개발



4 PART

01. 1石 3兆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46
02. 고양화훼특구, 규제 개선으로 활로 찾아	49
03.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관이 함께 합니다	51
0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 건축물축조신고 허용	54
05.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57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가능!	
06. 시화간척지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59
07. 고덕지구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 그리고 결실	62
08. 공여구역 주변지역, 접경지역 투자유치에 앞장서다!	65

01

1石 3兆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규제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추진부서 경기도 지역정책과 031-8008-4846

개선배경



-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면적 전국 363km²임
- 그간 지자체는 자원부족으로 도시공원 해소에 소극적이었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감수하였음.
- 공원이 실효되면 등산로 폐쇄, 지장물 설치,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개선내용



개선전

-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공원 :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내
약 145개소, 총 9km²
(축구장 약 1,260개 면적)
- 지자체 필요 예산 약 3조원 추정



개선후

- 훼손지 복구계획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 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 예상

〈 훼손지 복구계획 제도 〉

- **(개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도록 '09년 도입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 (훼손지*의 정의)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
 - *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필지
- '17년 6월부터 도내 미집행공원 전수조사, 도·시·군·공사가 참여한 간담회 개최, 국회·국토부 제도개선 방문·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과 설득으로 적극행정을 추진
 - '18년 4.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 '18년 8월 관련 지침 개정

기대효과



- 한 번의 개정으로 세가지 효과 즉, 시·군은 GB내 미집행 공원 해소로 약 3조원 예산 절감
- 주민은 공원 조성으로 토지보상 및 휴식공간 제공
 - 1km²의 공원이 할 수 있는 일 : 45만 그루 나무조성효과, 연 16.2톤의 미세먼지 흡수, 180만 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 제공
- 도는 보전부담금의 재정적 불이익 해소

〈부천 원종·괴안 공공주택사업 훼손지 복구계획〉

- 위치 : 부천 원종동 일원
- 사업면적 / 훼손지 복구면적 : 280,000m² / 42,000m²
- 사업내용 : 부천 근린공원 조성 (복구사업비 150억)



1석 3조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부 작성자 경기도 지역정책과 박인찬 031-8008-4856

경기도의 규제개선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앙부처 경진대회에 발표자로 처음 참석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 영광스럽고, 앞으로 공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그 날을 돌이켜 보면 본선에 올라온 10개팀중 첫 번째로 발표하게 되어 심적 부담도 컸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 참석하신 심사위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고자 팀원들과 같이 준비했던 과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네요.

‘20.7월 최초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인한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부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해결방안으로 “훼손지 복구계획”* 제도를 개선하고자 ’17.6월부터 사례조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현행 : 건축물 · 공작물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한해 공원 · 녹지 등 조성)

그 결과 ‘18.4월 “미집행 도시공원”을 훼손지 복구대상에 추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주민, 도, 시·군에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은 미집행공원 조성으로 토지보상 및 휴식공간 제공, 도는 보전부담금 재정적 불이익 해소, 시·군은 미집행공원 해소로 약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규제개선의 첫 걸음은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위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합리적 대안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규제개혁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 업무 중 불합리한 부분 찾아 보세요. 그에 따른 보람과 성취감은 무한대 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2

고양화훼특구, 규제 개선으로 활로 찾아

GB내 공판장 설치주체 완화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의 길이 열린다

 추진부서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032-8075-4251

개선배경



- 고양시(시행자 : 한국화훼농협)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공모에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40억원을 확보함
- 한편,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해 있어 관련법상 공판장 설립 주체가 지역조합에만 한정되어 있기에 품목조합인 화훼농협의 사업 추진이 불가, 사업 백지화 및 국비 반납 등의 위기에 봉착함
- 화훼에 대한 전문지식과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농협이 화훼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주체 자격 완화가 필요

〈 고양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 〉

- 사업부지 :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1-11외 4필지
- 사업비 : 195억원(국비 40억, 지방비 40억, 자부담 115억)
- 사업규모 : 41,779㎡(공판장, 집하장, 구판장 등 건축면적 22,485㎡)

개선내용



개선전

-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 주체가 “지역조합”에 한정



개선후

-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 주체를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로 확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 요청
 - 2019. 2. 경기도청 규제개혁 담당관실에 개정 건의 요청
 - 2019. 5.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과에 개정 건의 요청

- '19. 12월 중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예정
 - － 국무조정실, 경기도, 고양시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환경부를 적극 설득한 결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합의
 - －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공판장에 대하여 지역조합뿐만 아니라 품목조합도 설치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5. 마. 4)항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현 행	개 정 안
5. 마. 4)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마. 4)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선효과



- 화훼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유통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생산·경영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
- 유통구조 개선→ 화훼소비 촉진→ 화훼산업 재도약→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효과 기대
 - － 수도권 공영도매시장 기능의 강화로 농가에 불리한 민간 시장 주도의 화훼유통을 개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해 농가 소득 증대
 - － 판매가격 인하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로 현재 국민 1인당 1만 2천원의 화훼소비 금액이 2만원 이상으로 증가 예상
 - － 현재 6천억원 규모의 화훼시장이 향후 1조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
 - － 중도매인 매장 입점(70여 개, 약 140명), 경매장 운용인력(약 200명) 등 일자리 창출 효과



화훼유통센터 대상지



화훼유통센터 조감도

03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관이 함께 합니다

지자체 주도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진부서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과 032-8075-3081

개선배경



- 고양시의 약 48%, 127.4km²에 거주하는 약 22만 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토지가치 하락, 군 협의에 따른 인허가 처리 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특정 목적 개발 사업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아닌 기존 거주 중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사례를 발굴하고 해제(행정위탁)를 통해 규제 완화 추진
- 법령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해제 가능한 지역을 선별하여 국방부에 요구하는 형식을 취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로 타 시·군에서도 적용 가능

개선내용



개선전

- 고양시 전체 면적 중 약 48%(127.4km²)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 규제지역의 토지가치 하락,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 발생
- 통상 1개월 이상의 군협의 절차 소요



개선후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7.6km²) 및 행정위탁 협약 체결(18.6km²)
- 규제지역 내 원활한 재산권 행사 가능
- 군협의 기간의 획기적 단축 (1개월→1일)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 고양시·군부대 간담회 및 협의(시장·사단장 면담 등 실무협의 40여 회 개최)
 - 가능성이 높거나 수해도가 높은 지역 선정 작업부터 군부대 담당자를 참여시키는 등 군·관 협업체계 구축
 - 17.6km²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일부 지역(18.6km²)은 행정위탁 협약 체결
- 군부대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각종 행정 지원
 - 전국 최초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산프로그램(Q-GIS)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보급
 - 군부대(군보 협의 담당)와 시(허가 담당)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효율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업무 매뉴얼 개선 및 서식 표준화

개선효과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약 7만 명이 직접적인 수해를 받게 됨.
- 토지 가치 약 12조6천억원 상승
 - 경기개발연구원 『군사시설 피해실태 연구(2008)』에서 제시한 '자산가치 손실 추정방법' 적용
-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확보 및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효과 기대
- 행정위탁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민원 접수시 통상 1개월이 걸렸던 군협의 기간이 1일로 획기적 단축
- 전산조회 프로그램 구축으로 민원처리담당자(군·관)가 군사시설보호구역현황을 즉시 확인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 사유재산권 행사 활성화 및 행정절차 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부대에 대한 인식 개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



최신기사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 등 협의 빨라진다

송고시간 | 2018-04-18 08:47

표준서식 만들어...필수 사항 명시·첨부서류 최소화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軍) 협의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 협의 표준서식'을 정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 표준서식' (고양=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 협의 표준서식'을 정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을 시와 군이 표준 서식을 만드는 모습. 2018.4.18 [고양시 제공=연합뉴스] gsh@yna.co.kr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관이 함께 합니다



부 작성자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과 조용주 031-8075-3081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각종 공공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군사규제 피해현실 기초조사와 군 전문가의 전략적 제안 등을 검토한 종합 논리를 개발해 주도적으로 군사규제를 혁신하고자 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7.6km²) 및 행정위탁(18.6km²), 군협의 서식 표준화 등의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사규제 해제는 군 당국의 전유물이라는 것이 관례였기에, 우리시 주도로 군사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0여 회의 실무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시민불편 개선이라는 최우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군·관이 협력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사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군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재준 시장님, 실·국·과장님, 실무진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완화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행안부, 경기도 주관 경진대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제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규제 개선에 지자체, 중앙부처, 정치권, 시민단체, 관련 단체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내고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군사보호구역지정 해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만큼 고양시는 미래를 위한 도약에 앞장서는 평화경제특별시로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규제로 인해 권리행사를 제한 받았던 시민들을 위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0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 건축물축조신고 허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신고 허가

 추진부서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과 031-760-2952

개선배경



-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가설건축물(예, 컨테이너) 설치가 불가함
-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내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등이 필요한 자영업자 및 소규모 제조업소 등의 불편 발생
 - 제한목적 :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

※ 관련규정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개선내용



개선전

- 가설건축물(예 : 컨테이너) 설치 불가



개선후

- 가설건축물(예 : 컨테이너) 신고 허가

- 현황
 -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치 : 탄벌A 지구단위계획구역(탄벌동 138-3번지 일원)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허 사례

신청일	신청위치			신청인	가설건축물 신청목적	인·허가부서 협의의견
	위 치	면 적	지목			
19.06.18	탄벌동 144-6	844㎡	대지	심○○	용도: 컨테이너조(임시창고) 건축면적: 61㎡(4동)	부동의
19.06.04	경안동 67-30	63㎡	대지	박○○	용도: 컨테이너조(임시사무실) 건축면적: 18㎡(1동), 연면적: 36㎡(2층)	부동의
19.04.30	추자리 45	3,293㎡	대지	김○○	용도: 컨테이너조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건축면적: 90㎡(4동)	부동의
18.12.27	경안동 73-13	325㎡	대지	박○○	용도: 컨테이너조(임시창고) 건축면적: 17.1㎡(2동)	부동의

-
- A two-story modular building constructed from stacked grey containers. The building has white-framed windows and a dark blue door. A metal staircase is attached to the side. It is situated next to a red building.

발행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검토보고 1부, 분.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



부 작성자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과 김준섭 031-700-2952

광주시 도시계획과는 광주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방향을 설정하여 시가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로,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행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해당 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법령 그대로 업무를 처리함은 당연한 의무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법령해석이나 업무추진에 유연성을 갖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공직 분위기, 적극행정 사항에 대한 팀장·과장·국장 등 팀원들의 호응으로 인해 추진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적극행정” 내용에 대한 경·중·수혜나 효과의 정도와 관계없이 작고 경미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간다면 경직돼있고 소극적인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함으로써 임시창고, 임시 사무실 등이 필요한 자영업자 및 소규모 제조업소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와 같은 적극행정이 민간부문 일자리도 창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05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가능!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추진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과 031-590-2385

개선배경



- 남양주시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부족 및 환경평가등급 기준 미충족으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 불가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군에 할당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범위 내 추진 가능하나, 남양주시 해제물량 부족
 - 사업대상지의 환경평가등급은 2등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한 등급(3~5 등급) 기준에 부적합

※ 관련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2-1

개선내용



개선전

-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 불가



개선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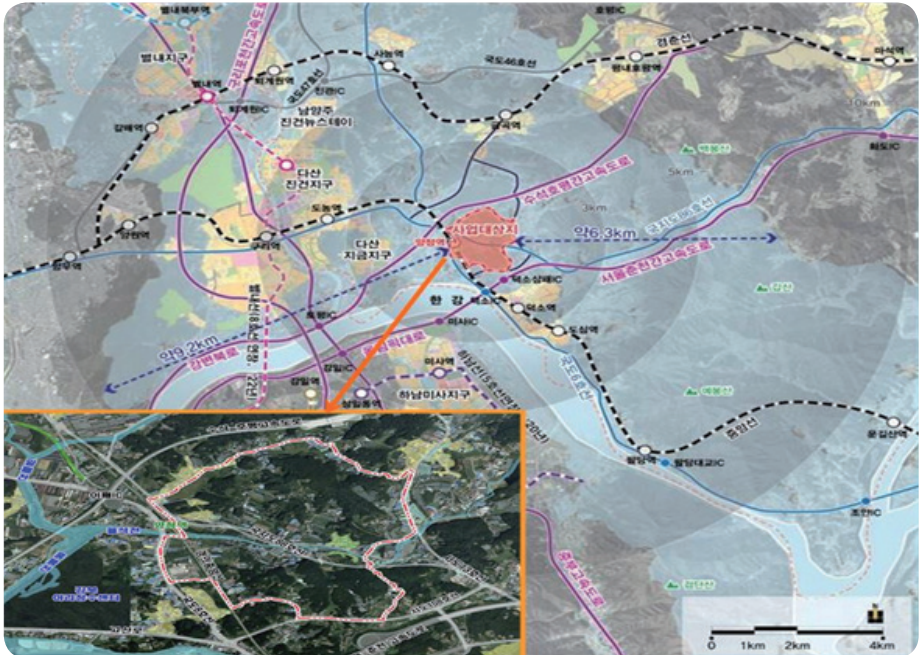
- 개발제한구역 해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14호/'18.6.8.)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 가능

-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추가 확보(2,228km²)
- 국토교통부에 환경평가등급 조정 건의로 환경평가등급 조정 (2→3등급 / '10.7.15., '11.2.8.)

개선효과



-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19 ~)
 - － 다산신도시 및 3기신도시(왕숙1지구, 왕숙2지구)와 연계한 지역중심도시 조성
 - － 첨단산업시설 및 복합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 실현



위 치 도

경기도민일보

2018년 06월 01일 (금)

종합 02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남양주시가 31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를 했다.

시에 따르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외부음, 양정동 일원에 206만㎡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는 정보통신(ICT) 기반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해 4차 산업 거점도시와 청년·신혼부부,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등 주거단지를 조성해 이상적인 직장·주거 근접 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사업은 올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9년 개발계획 수립, 2020년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사업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기까지 장기간의 생활불편 등을 감수하면서 성원에 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양로기자

06

시화간척지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간척지 임시사용범위 확대로 향토문화 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전시 가능

 추진부서 경기도 안산시 대부개발과 031-481-6981

개선배경



- 「농어촌정비법령」 및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임시 사용 범위(연구·시험용 작물 재배)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간척지 매립 공사(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
- 간척지 내 각종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이 무단으로 투기된 채 방치되어 있어 토양·수질 오염 및 악취 민원 발생
- 무단 방치 쓰레기 주변 미관을 저해하여 안산시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

※ 관련규정

－ 「간척지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

개선내용



개선전

- 개간척지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 (간척지 임시사용 범위 제한)
- 연구 시험 등을 목적으로 단년생 (다년생 포함) 작물이나 목본류 등 경작만 가능



개선후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2조의2 신설 (간척지 임시사용 범위 확대)
- 단년생 작물의 경작
- 농업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시험 연구를 위한 작물 등의 경작
-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전시 가능

〈추진경과〉

- － 법률 개정 간담회 및 개정의견 검토 요청 : 2015. 8.
- － 시화간척지 임시사용기간 확대 등 협의[↔한국농어촌공사] : 2015. 12.
- － 대송단지 안정적 사용방안 연구용역 실시[경기TP] : 2016. 1.~10.
- － 대송단지 연구용역 요약본 제출 및 반영 건의[→농림축산식품부] : 2016. 8.
- － 사용목적 확대를 위한 정책건의 : 2016. 9.
- － 시화간척지 임시사용기간 확대 등 협의[↔한국농어촌공사] : 2017. 4.
- － 규제개선 건의(안산시→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 : 2017. 6. 23.
-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대부해양관광본부 방문(1차) : 2017. 10. 13.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대부해양관광본부 방문(2차) : 2017. 11. 29.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건의(경기도→국무조정실) : 2018. 1. 23.
- 관련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 현장방문 및 연찬 : 2018. 1. 30.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신문과) 주재 현장 컨설팅 실시 : 2018. 3. 6.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 2018. 5. 1.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 2018. 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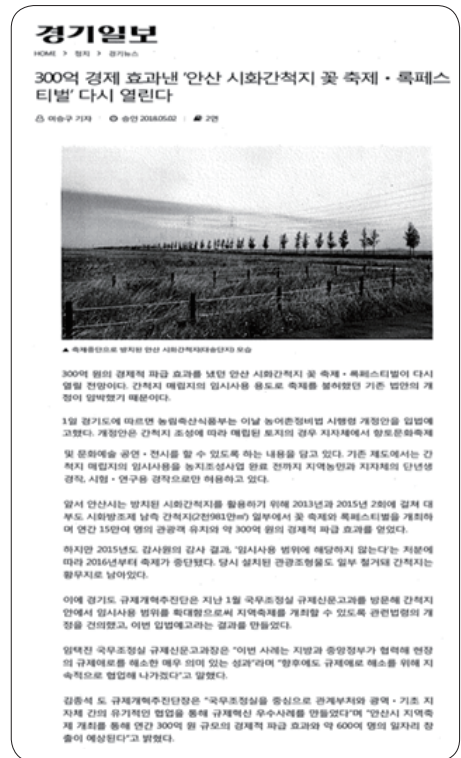
개선효과



- 다양한 향토 문화 축제·공연 전시를 통한 대부도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경제적 파급 효과 : 300억원(년) / 일자리 창출 : 약 600여명
- 미준공 상태 장기간 방치된 시화간척지 합법적 사용가능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추진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민원 해소



위치도



언론보도

임시사용 간척지 사용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든다



✎ 작성자 경기도 안산시 대부개발과 백종선 031-481-6981

오랫동안 방치돼 오던 시화간척지에 테마파크를 만들고 “튠업축제”와 같은 꽃 축제와 “락 페스티벌”등을 유치하며 외부 관광객들의 많은 방문으로 상가는 물론 주민 대다수가 변화되는 지역의 미래를 기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임시사용 간척지에서 할 수 있는 “임시사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에 따라 관광 조형물등이 철거되고 모든 축제가 중단되면서, 주변 상가 경기 침체는 물론, 장기 방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안산의 관광 이미지 훼손 등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는 공공용 임시 사용 범위를 “연구시험등을 목적으로 단년생(다년생 포함) 작물이나 목본류 등 경작만 가능”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여타 다른 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간척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을 그동안의 축제, 행사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2015년부터 지역 국회의원·시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실시 및 상위기관에 불합리한 내용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안산시 예산법무과,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간담회 및 현장 설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 바,

마침내 2018. 8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마침내 그동안 간척지 임시사용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 지침에 의해서만 규정되었던 것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축제 공연,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꾸준히 두드렸던 규제개선 요구사항이 관련 기관 및 부서 사람들의 협업과 노력을 통해 성과를 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부도 시화간척지에 행사 및 축제 등이 활성화 될 수 있어, 향후 안산시 대부지역은 이전보다 연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3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시 약간의 불편함으로 생각되어질 규제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많은 변화를 포기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도 개선되어야할 규제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07

고덕지구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 그리고 결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진부서 경기도 평택시 정책기획과 031-8024-2231

개선배경



- 고덕지구 내 탄약고 이전 지연('15년⇒'21년)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존치
- 군사시설보호구역 존치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정상 추진 어려움.
※ **관련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개선내용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국방부 고시 제2018-34호(2018. 12. 13.)]
－ 해제지역 : 매그넘탄약고 주변 143㎡/161필지 적기 건축가능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019. 3. 5.)
－ 알파탄약고 주변 대체도로 개설가능/약 5,100세대 교통 편의제공

추진과정



- 개발행위 허가(대체도로 포장) 협의 요청(LH→평택시→공작사) : '16. 9.19
* ('16. 9.19) 폭발물 제한보호구역내 기반공사 불가(부동의)
- 관계기관 회의(국무조정실, 국방부, 공군본부, 공작사, 평택시, LH)
－ 3회('16. 9.19, 9.30, 11.30)/탄약고 분산저장을 통한 해제 요청
* 안전성 검토용역을 통해 방호시설 설치 등 방안을 마련하여 재협의(공작사)
⇒ 고덕지구 내 탄약고 폭발영향 검토 용역 실시(LH/'17. 1월 ~ 4월)
- 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개선과제 검토 요청 : '16.12. 8
* 개선과제 : 공익사업으로 이전이 확정된 군보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행위 허가 완화
- 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개선과제 검토 요청 : '17. 3.16
* 개선과제 : 고덕신도시 탄약고 주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군보구역 행위(수용곤란)
- 행위허가 협의(공군본부, 경기도, 평택시, LH) : '17. 3.28
* 탄약폭발 용역결과 및 방호시설 계획 반영/행위허가 협의 추가 대안 논의
- 대체도로 개설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 : '17.12월 ~ '18.11월

- 관계법령 개정*으로 규제개선 추진(국방부) : '18.12.10
*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이 확보된 대체도로는 개설이 가능토록 함.
- 매그넘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43만㎡) : '18.12.13
* 매그넘탄약고 탄약 분산저장 합의서 체결('18. 1.19), 시행('18. 6. 4) 및 완료('18. 7.27)
-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개정(국방부) : '19. 3. 5

개선효과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형 국책사업의 지연 예방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도시기반시설의 적시제공으로 단지 입주인, 산업단지 입주업체 교통 편의 제공 및 도시 활성화(집단민원 예방)
 - 직접 : 아파트 3,284 세대, 이주민 1,817 세대
 - 간접 : 북부지역(송탄) ~ 서부지역(청북) 주민 이동거리 단축
-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유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직자의 적극행정과 협업을 통한 규제 개선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든다



부 작성자 경기도 평택시 정책기획과 김대욱 031-8024-2231

그 동안 다년간 실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업무를 처음 하게 때에는 느낌은 생소하다! 어렵다!! 애매모호하다!!!가 전부였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았을 텐데 왜 그 규제를 굳이 없애야 하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하여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을 만나면서 이런 나의 의구심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규제는 있어야 하지만 그 자체가 시민과 기업에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규제개선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떤 규제를 개선하고자 할 때 한 사람이 과제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람과 기관과 협업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가 규제개선에 있어 공직자의 적극행정과 협업을 얼마나 중요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이하“고덕지구”) 조성하던 중 고덕지구 내 탄약고(군사시설) 이전 지연(2015년→2021년)으로 고덕지구의 정상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러 관계기관(국무조정실, 국방부, 공군본부, 공작사, LH, 평택시)과의 협의를 임하고 각 부서(주민지원과, 도시계획과, 기업투자과 등) 간의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8.12.13)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 업무를 하면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각 부서 간 충분한 협업이 이뤄진다면 규제 개선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08

공여구역 주변지역, 접경지역 투자유치에 앞장서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추진

 추진부서 경기도 파주시 투자진흥과 031-940-5796

개선배경



-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수도권규제 뿐만 아니라, 군사규제, 농지구제 등 경제활동의 제약을 포함한 각종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외 경기침체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전무

개선내용



개선전

-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기업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개선후

- 산업단지 주민설명회
⇒ 주민-시-사업자 협력체계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면제
⇒ 심의면제, 6개월 단축
- 산업단지승인 절차간소화
⇒ 일괄의제, 12개월 단축
-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시행승인
⇒ 先승인, 後토지확보 가능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경기도
-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 240회 협의추진 ⇒ 60개사 분양 완료

실무상 어려움



- 수도권규제, 군사규제, 농지구제 등 경제활동의 제약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기업체, 협회, 단체 등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설명회를 추진하여도 접경지역으로 인한 남북관계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 또한, 파주희망프로젝트2·3단계 사업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수도권정비계획법」,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 받고자 중앙부처와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미비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률개정 요청 등 규제개선과제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개선효과



-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통일경제특구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의 고용창출 2,000여명, 생산유발효과 11,862억원을 시작으로 단계별 개발 추진이 확산될 것입니다.
-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인 경기도(21개 시·군·구), 인천광역시(2개 군·구)는 산단 절차 간소화, 수도권 심의 면제의 혜택이 부여되며,
- 강원도(9개 시·군), 충청도(4개 시·군), 경상도(16개 시·군) 등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의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경제를 진흥시켜 균형발전 도모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 하였습니다.

일간경거

2016년 05월 20일 금요일 013면 지역

파주시, 찾아가는 투자유치 행보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자연친화적 도시 조성

파주시는 경기북부를 창조산업 거점지구와 통일시대 경제 중심지로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유지를 자양원동력 도시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투자유치 행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미군안락공역지 등 가용부지에 대해 홍보물을 제작·발행하는 한편, 각 기관·협회 및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내·외 대기업 및 각종 협회·단체에서 70회에 걸쳐 파주시를 직접 찾아가 홍보활동을 위해 622회에 걸쳐 각 기관·협회 및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최대의 입지조건을 갖춘 파주시를 홍보하고 사업환경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같은 투자유치 홍보 노력의 결과로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 부지 15만 평 파주중앙로 일방산업단지 등에 대해 올해 5월 15일 국외교섭부로부터 산업단지 공급청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인명적으로 생산 활동에 영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사업부지 내 입지조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직접 방문하는 투자유치 활동으로 삼고 삼은 도시, 기업인 만난 파주를 만들기 위하여 널리 알리는 한편, 앞으로는 주거형, 복지형, 민간형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상생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기환 기자
hgg@pa.gov.kr



언론보도

중국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공여구역주변지역, 접경 지역 투자유치에 앞장서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추진



✎ 작성자 경기도 파주시 투자진흥과 장중규 031-940-5796

규제개선은 일자리창출이다!

기업하기 편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하고 허가해주는 공무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일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해결사가 될때 비로소 기업도 안심하고 투자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그 간 4년여 동안 반도체 · 디스플레이 · IT · 전자 등 관련 협회, 단체, 기업체 등에 240회 이상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파주 희망프로젝트 1단계 산업단지에 2천명의 직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향후 추진 될 2 · 3단계 산업단지에 8천여명의 고용창출과 4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어 낙후된 파주 북부지역 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에 초석이 될 것이 확실하며, 통일경제특구의 배후도시로서 체계적인 개발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파주시 공무원들은 더욱 발로 뛰고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 및 규제에 맞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